

다산포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변하고 통하는 길만이 활로다

헌법의 영토 조항은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다른 규정(제4조, 제66조, 제69조 등)과 충돌된다. 영토 조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남한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북한 정부는 불법 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화 통일 조항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당사자가 된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제 무대에서 분단 국가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1991년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남과 북은 대외적으로는 두 개 국가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국가 사이에 준하는 특수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규범적 현실이다.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면서 이와 다른 목적임을 이적 행위로 비난하기도 하는데, 한반도의 영토 조항만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주장이야말로 나라의 일부를 넘겨주는 이적 행위로 몰릴 여지가 있다. 남북 관계를 정치 이슈로 삼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백령도에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백령도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다 경계를 넘기도 했다. 북에 끌려갔다 돌아오면 남에서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했다. 구체적인 평화와 신뢰를 쌓는 실천이 될 것이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날씨가 좋아 해안선과 큰 강이 잘 보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뚜렷했다. 고속전철은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포까지 대략 두 시간 30분이면 달린다. 아마 조선 시대 실학자들이 다시 태어나 본다면 격세지감이 들 것이다.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해 경제가 낙후되었다고, 그토록 수레와 도로를 강조했던만, 열악한 도로 사정은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옛일이다.

그런데 우리 도로망은 휴전선으로 끊겨 있다. 3편이 바다이고 북쪽 한 쪽은 완전히 막혔으니, 섬 아닌 섬이로되 섬만도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민망하다고 했던 북한 도로의 개선이 북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전철이 달리면 다섯 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뿐인가.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져 유럽 철도로 연

결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길이 아닌가.

한반도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만드는 것이지만, 분단이 그러했듯, 분단의 해소도 남과 북만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얼마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더니, 어느새 남북 관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참으로 앞일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압조가 없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역사 속엔 아이러니가 있다. 비둘기과가 집권할 때는 매파의 비토로 평화의 완성이 좌절되다가, 오히려 매파 집권기에 평화의 결정적 진전을 이뤄 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챌 때이며, 천재일우라는 단어가 어울릴 때라 믿고 싶다.

비행기 창밖에 강진만이 내려다보이더니 곧 제주도가 눈에 들어왔다. 제주도가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것은 조선 시대부터였다. 역사는 흐른다. 비행기로 평양을 드나들고, 기차로 신의주를 통과해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 런던까지 달리며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꿈꿔 본다.

社說

지방선거 권리당원 참여율 높일 방안 없나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겨우 40%대에 그쳤으며, 이어 진행된 지방의원 경선에서도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지방의원 경선마저 당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두 명 중 한 명은 투표율 포기했으며 다소 투표율이 높았던 전남 지역도 40%~70%를 기록했다. 결국 권리당원의 경우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만큼 당내 경선에 높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 같은 낮은 경선 참여율은 경선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으로 당원들의 무관심을 불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후보들이 표밭을 다지기보다는 광역단체장 출마자에게 줄을 서는 구태를 반복한

것도 당원들의 의견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입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당원 모집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서 막을 내린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율은 40%대였다. 광주시장 경선 중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투표율 42.08%, 전남 지사 경선은 투표율 45.97%에 그쳤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 조직력에 의해 승패가 판가를 날 가능성이 크다. 권리당원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사실상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방식을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선 참여는 선거 민주주의를 이끄는 과정인 만큼, 권리당원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숙한 선거 문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가물에 단비다

조선업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 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옛그제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영암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돼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목포는 지표상으로는 미달했지만 영암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거주하는 등 동일 경제권이자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초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전국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와 영암은 누락돼 정

지권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광주일보 또한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암과 목포 추가 지정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목포와 영암에서는 취업 촉진 수단 및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는 물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및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분 확대된다.

지나해 하반기 목포 지역 취업자 수는 10만63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880명이, 영암은 3만700명으로 4400명이 줄었다. 1년 새 양 지역에서 1만22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만큼 조선업 침체에 따른 타격은 심각하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진 만큼,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NGO칼럼

오월 정신과 복지 도시 광주



문 창 인
광주복지연대 대표위원

의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소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복지가 아닌 시민과 현장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사람 중심 광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3일, 사회복지 68개 직능 단체와 주요 기관, 그리고 8개의 협력 기관 등 광주 복지의 모든 현장 조직들과 단사자 단체들이 한데 뭉쳐 '광주복지연대'를 창립했다. 광주복지연대는 '시민 중심 현장 중증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자'라는 기치 하에 ▲시민들의 복지 참여 ▲행·의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권익 향상 ▲광주 복지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민·관·정 협치 실현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복지 철학과 마인드를 가진 시장과 교육감,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등을 선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복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시민 중심 복지 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이자 오월과 촛불이 준 선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광주 리더 초청 강연, 지방선거 복지 공약 만들어 제안하고 답변받기, 좋은 복지 후보 선정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리더 초청 강연은 5차례 진행됐는데

광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광주'에 대한 미래 비전과 복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방선거 복지 공약을 먼저 현장과 시민들로부터 정책 공약을 수렴하여 미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 15개 핵심 공약과 59개 영역별 공약을 만들었다. 이후 마련된 정책 공약을 시장 후보자 등 출마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아 이를 시민들과 현장 활동가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누가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후보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좋은 복지 후보 선정 공모' 사업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복지 철학, 복지 활동, 복지 공약, 소통 협치에 대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점한 후 최종 선정된 후보자들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광주복지연대의 지방선거 대책 활동이 그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월과 촛불 정신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복지가 아닌 시민과 현장이 주도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 달여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합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으면 한다.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이미 끝난 선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복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적극 소통하겠다

는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민선 7기 광주시장 당선자 복지 분야 인수위원회에 현장의 참여가 보장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복지 공약 이행 및 점검 체계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 이는 촛불 이후 시민들이 바라는 열린 혁신을 실현하는 지방정부의 미래상과도 일치되며, 민선 7기 새로운 광주시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형성하는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오월이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들은 군부독재에 맞선 참여와 저항, 연대를 통해 민주 세상을 꿈꿨다. 그동안 광주의 오월 정신은 민주와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 한 축에는 총장로와 금남로에서 주먹방을 나눴던 야주머니들과 현현에 앞장섰던 시민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월 정신의 한 축이었던 나눔의 정신에도 주목하지는 얘기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 보여준 광주시민의 주먹방과 현현의 정신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복지 도시 광주'로 승화되는 5·18 민주항쟁 38주년이 되길 바란다. 오월과 복지의 공동 분모는 고립과 소외, 배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시민들이 많은 대동세상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 고

무엇을 위한 속도입니까



양 흥
수필가·목사

러 주어야 소통이 원활해진다.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교통의 흐름이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속도와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저속 차선에서 규정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면 어느새 뒤에서 뱅뱅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내 차선에서 내 속도로 그냥 가고 있으면 어느 틈에 앞 차선으로 치고 나가며 눈을 부라리고, 하얀 눈을 뒤집고, 나를 흘려보며 지나가는 이들이 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점잖은 편에 속한다. 심지어 소리를 질러 욕설을 퍼붓고 내 차를 받을 듯이 스키며 지나가기도 한다.

도로에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간 현대인들은 마치 속도의 뒷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속도를 행복의 필수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나라 도로는 전국이 사통팔달이다. 그리고 자동차도 갈수록 그 성능이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느슨하면 경쟁력이 없고 낙오된다. 그것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수칙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스마트폰 세대나 디지털 세상이 모두 그렇다. 속도는 경쟁을 붙여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목욕이 있을 때 스위스에서 일곱 분의 역사학자들이 시무하는 교회에 방문한 적

이 있었다. 20여 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 관광과 휴식을 갖는 일정에 동참했다. 총회 선교기관에서 후원해준 차량으로 길을 떠났다. 바쁜 일정을 끝내고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이니 가면서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어느 때처럼 쉬지 않고 속력을 내어 달렸다. 목사님 한 분이 쉬어가지고 했다. 그러자 운전은 맡은 분은 차에 속도가 붙었을 때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음을 자랑하던 그는 운전하고 와서 피곤하니 먼저 가서 자야겠다며 혼자 일어나 속소로 가버렸다.

손님들의 대부분은 한국이 처음인지라 국토를 종단하면서 한국의 역사, 지리나 환경 이야기 들을 나누며, 피차 얼굴도 익히고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고 싶었는데, 번의 아니게 경기도에서 거제도 6·25 포로수용소까지 거의 쉬 없이 달려 왔으니, 쉬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은 셈이었다. 그때 한 분이 편지 않은 인상으로 '무엇을 위한 속도입니까?'라며 문이 사과드리느라 진땀을 뻘 적이 있었다.

팔십을 직전에 두고 광주에 내려와 살면서 요즘은 50여 년 전 헤어졌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하나 찾으며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 친구가 자동차를 없앤

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한다. 그 친구 역시 나처럼 평생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제법 성공한 친구다. 광주에 내려와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무엇 하나 나고 하소연이다. 와서 들이받는다는 표현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러라 싶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자동차가 무엇일까? 우리를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도구다. 그러나 그 유일한 도구는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릴 때, 고장일 때, 제 길이 아닌 여러 차선을 그것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마치 재주나 부리듯 넘나들며 끼어들 때는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살상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에 놓인 길을 안전 속도에 맞춰 가는데, 왜 그것밖에 못 달리는냐고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우리는 가야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이 차선, 저 차선으로 함부로 넘나들이 없이 남의 길에 솔깃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내 속도로 가야 한다. 값비싼 외제차를 타면 무엇 하며, 성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무엇 할꼬. 정해진 법규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 보존이거늘,

無 等 鼓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술이면 용서되는 대한민국... 취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www1.president.go.kr)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청원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음엔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내세워 온라인으로 국민 청원을 수렴하는 코너를 개설

날’을 지정하지는 청원이 눈에 띄었다. 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해 오히려 더 차별받는다며 ‘대체휴일을 없애달라’는 청원과 회사 재량으로 판단되는 휴무가 근로자에게 위화감을 준다며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모순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대국민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에 23만5796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검찰

국민청원 게시판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 만 수백 건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뜨겁다. 대부분 현안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내용이다. 검찰이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3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네티즌들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과 정치인의 특권 의식을 질타하는 청원을 올렸다.

대체 휴무일인 어제의 게시판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합쳐서 ‘가족의

과거사위원회가 4월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 씨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해 재수사 가능성을 연 것도 국민청원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감정적이거나 상식적 어긋난 청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경우 부적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청원 내용의 육색을 가려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건강한 창구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송기태 예방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